

새해 금융발전과 서울시의 과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연구실 연구위원

금융교육센터 director

jbkim@kif.re.kr



1. 새해 금융발전을 위한 7가지 과제

새해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 과제는 다음과 같이 7개로 지적될 수 있다. ①해외진출확대, ②자본시장 질적 발전, ③가계부채 완화 및 부동산 중심 가계자산구조의 전환, ④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⑤level playing field 개선, ⑥체계적인 학교금융교육의 도입, ⑦금융감독당국의 시장지킴이 기능 강화 등이다.

첫째,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해당 금융회사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사업에 해당한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실시간 글로벌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1960년 초반 해외진출 경험이 없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설립된 무역진흥공사

* 본 원고는 “2015년 금융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한국금융연구원 2015년1월)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자문위원, OECD Research Committee 위원, 금융학회-은행법학회 이사.

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었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도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1960년대 수출기업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무역진흥공사의 경험을 살려 공적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원하는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증권사들의 투자은행업무의 질적 발전이 필요하다. 국내 증권사들의 투자은행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와 증권사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국내 증권사들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개별 증권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이는 증권사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반으로 활용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증권사의 규모 확대 역시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상으로 제한된 사업지주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지주회사로 하여금 M&A 등 투자은행업무를 영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2년 기준 가계의 자산구성에서 비금융자산(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미국은 31.5%와 68.5%, 일본 40.9%와 59.1%인 반면, 우리나라는 각각 75%와 25%이다. 이처럼 가계자산구성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한 부동산 의존 상황에서는 가계가 금융자산을 보유할 금전적 여력이 없으며, 이는 결국 금융산업의 발전 여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자산의 금융자산으로의 자산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동시에 은퇴 후를 대비하는 금융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주회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주회사는 사업기구일뿐 아니라 정책기구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정책기구로서의 중요한 기능은 자회사 건전성 유지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책임을 가져야(source of strength doctrine)하는데, 이 제도 도입으로 은행자회사 수가 많을수록 건전성이 더 좋아지는 결과가 이루어졌다. 국내에도 이러한 건전성유지 책임원리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자회사 은행 인수 후 통폐합하여 왔는데, 건전성유지 책임원리를 전제로 할 때, 이는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다섯째, level playing field(동등한 기회의 원칙)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간 일부 금융부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level playing field를 제한하여 왔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약자를 강자로 변모시키는 생산적 보호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는 약자로 남도록 만들거나 부실, 불법 및 불공정행위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상업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은행이 모두 동일한 기준의 건전성감독을 받는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은행은 상업은행과 비교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건전성을 갖추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지원이라는 이유로 낮은 건전성기준을 요구한다면, 이는 자격미달의 금융회사가 시장에 진입하여 오히려 서민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여섯째,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과 소비자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내 체계적인 금융교육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역량은 한 두 번의 특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정규교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본격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 현행 고등학교 교과 중에 경제과목이 있으나, 이는 경제일반에 치우쳐 있고 체계적인 개인재무(personal finance)는 담지 못하고 있다. 개인재무는 청소년에서 은퇴에 이르는 생애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소득, 소비, 저축, 투자, 기부 등의 금융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일곱째, 감독당국의 시장지킴이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시장금융이 발전할수록 사업모델은 복잡해지는 한편, 불공정 및 부정행위는 점차 정교해지는 현상이 빚어진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감독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적 및 민사적 권한을 갖고 있다. 심지어 영국 감독당국은 형사기소권도 갖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장남용(market abuse)행위에 대한 낮은 수준의 금전적 과징금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는데, 국내 감독당국의 제재 권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서울시의 금융여건과 개선방안

서울시의 금융이 우리나라 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서울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7가지 과제는 서울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이 가운데 몇 가지를 간단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서울 소재 기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해외 기업의 서울투자 즉, 해외투자유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해외진출뿐 아니라 투자유치실적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지난 2007-2012년간 해외투자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에는 1,700건이 넘었지만 2012년에는 1,200건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투자규모도 2007년 65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27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58억달러 수준이다. 산업부문별로 보면, 농수축산및광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및건설업 분야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해외투자 유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표 1> 서울시의 해외투자유치 실적

	건수	투자액 (백만달러)	농수축산업 및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2007	1,623	5,154	4	3	146	266	1,450	4,838	23	47
2008	1,721	6,464	11	4	130	355	1,567	5,967	13	138
2009	1,306	4,397	6	1	111	414	1,173	3,976	16	6
2010	1,314	2,678	5	2	121	432	1,176	2,241	12	4
2011	1,207	4,114	3	0	121	385	1,066	3,706	17	23
2012	1,211	5,811	2	4	120	1,035	1,082	4,771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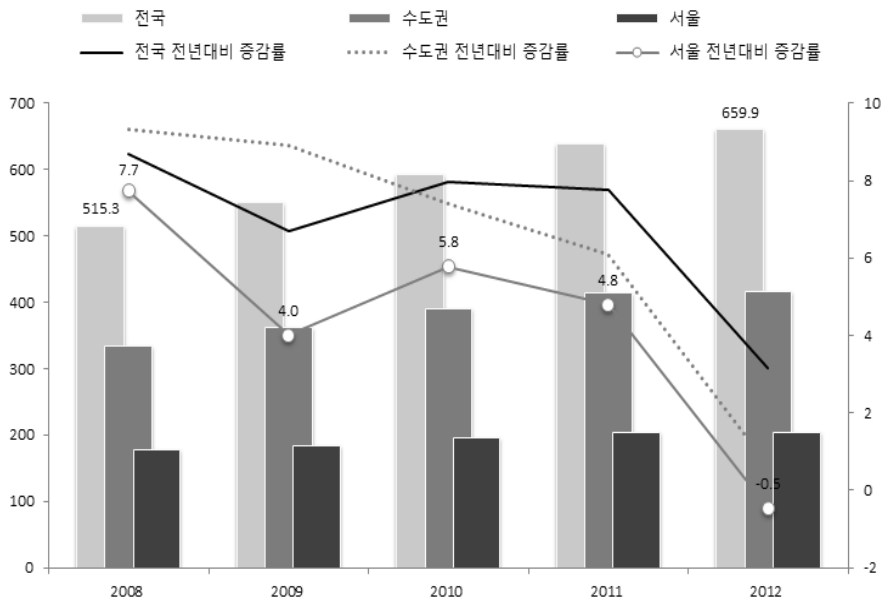
출처: 서울통계

해외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듯이, 해외기업 또한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현지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투자자가 서울 및 국내 금융시장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표 2〉 서울지역 가계대출의 비중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도권 대비	54.0	53.2	50.8	50.0	49.4	48.9
전국 대비	34.7	34.4	33.5	32.8	31.9	30.8

출처: 한국은행



출처: 한국은행

〈그림 1〉 가계대출의 전국, 수도권, 서울 지역 추이

둘째, 가계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의존현상 완화 필요성 관점에서 볼 때, 2008~2012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지역 가계대출의 추이는 다소 다행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 대비 비중은 2007년에 54%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48.9%로 하락하였다. 전국 대비 비중은 2007년 34.7%에서 2012년 30.8%로 하락하였다. 이는 그 만큼 분석대상 기간 동안 서울지역의 가계대출 확대가 상대적으로 자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1>에 의하면, 가계대출의 확대는 서울 혹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 크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계자산의 부동산의존 완화 측면에서 볼 때, 서울지역의 가계대출 안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해야 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은 대부분은 연1회 한 시간짜리 특강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우에는 심지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를 찾는 저소득층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교육청이 주도하여 금융교육을 학교교육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